

비자 없이 미국 간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 국민들도 미국에서 3개월 이내 체류하면서 관광하거나 상용 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 의회의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 상·하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6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에 합의하고 내주 초까지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합의안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출국통제 및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현행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인 비 이민 비자 거부율 3% 미만을 1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 거부율이 10% 미만으로 완화될 경우 작년 비자 거부율이 3.5%를 기록했던 한국을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새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국 후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합의안은 오는 2009년 6월 말까지 완전한 생체인식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이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국토안보부 장관의 비자 거부율 완화 권한을 정지토록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는 공항 출국 통제 시스템을 94%까지 설치했고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97%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체인식 출국 통제 시스템도 내년말까지는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측은 미국측의 출국통제,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 구축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은 현재 미국과 진행중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기술협의를 완료하고 전자여행권을 도입하게 되면 내년 7월 이후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범여주자, 호남서 정권재창출 호소

대통합신당, 광주·전남·북 창당대회 순학규·정동영 등 참석 호남 기선잡기

범여권 제3지대 신당인 미래창조통합민주당(이하 대통합신당)이 27일 광주시당, 전남·북도당 창당대회를 잇달아 열고 호남 지역 조직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날 광주시당 창당대회에는 순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천정배·신기남 의원, 김두관 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등 범여 대선 주자들이 6명이나 참석, 기선 잡기 경쟁을 벌여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3곳의 창당대회에 모두 참석한 순학규 전 지사는 축사에서 "이번 대선은 미래 대 과거, 민주 대 독재·권위주의, 디지털 지식산업 대 아날로그 개발경제, 평화 대 냉전 세력 간 대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5·16을 구국혁명이라고 찬양하는 수구세력, 땅투기 낡은 경제 세력, 영남 패권주의에 기대는 지역주의 세력에게는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순 전

지사는 또 "이번 대통합은 국민대통합의 첫 단추"라며 "민주적 방식의 대표권 아니라 한나라당의 개혁·미래 세력까지 모아서 국민대통합으로 함께 갈 것을 약속한다"고 역설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2007년 시대정신은 땅투기 후보, 독재 잔재 후보에게 있지 않고 평화·미래·민주 세력인 우리에게 있다"며 "가슴에 있는 패배주의의 악령을 벗어내고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박상천 대표뿐 아니라 이인제·추미애·조순형·김영환 후보 모두 아무런 조건 없이 대통합에 합류하고 완전 그린대 경선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것은 정권·특권·정경유착·음공음해·공안통치 등이었다"며 "이번 12월 대선에 또 다시 승리,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대통합을 이루고 광주를 빛의 도시로 만들

자"고 역설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배제론과 해체론이 없는, 욕심과 기득권을 모두 버린 대통합만이 12월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난 2002년 경선보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더 발전한 방식의 멋진 경선을 통해 국민 대감동 드라마를 만들자"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자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유일한 후보"라며 "비호남지역에서 개혁세력의 지지를 이끌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장관은 "3기 민주 정부는 소외·가난·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동서 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남북화해로 통일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서민 출신 김두관이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임현호 광주교육대 총장·박경민 전 광주YWCA 사무총장, 전남도당위원장으로 김효석 의원,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정경환 전 의원·이강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범여주자 한자리에

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래창조통합민주당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김두관·순학규·이해찬·정동영·천정배·한명숙(왼쪽부터) 등 범여 대선 주자들이 창당 관계자의 보고

/*워싱턴기자 jrwi@kwangju.co.kr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준공

순천 해룡산단내에 연산 3천t 규모

포스코는 27일 순천 해룡산단내에 연산 3천t 규모의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포스코 이구택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서갑원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및 김홍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기대되는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순천 해룡산단내에서 가동함으로써 세계적인 종합소재회사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덩어리 형태의 마그네슘 인고트(Ingot)를 가열로에서 용해시켜 중간소재인 슬라브 제조공정을 거치

지 않고 곧바로 얇은 판재로 만드는 스트립 캐스팅(Strip-casting)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포스코는 "세계 마그네슘 판재시장은 아직 태동기에 있지만 향후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외 인근 중국, 동남아에 휴대폰, MP3, 디지털 카메라 등 모바일 전자제품 케이스용으로 주로 판매하고, 향후 스티어링 휠, 트랜스미션 케이스 등 자동차 및 레저부품용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벼우면서 강도와 연성이 일찌저찌 성형성이 우수한 마그네슘 판재는 재활용, 전자차량 등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경쟁소재인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에 비

해 우위에 있다. 이날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포스코는 직접 생산한 마그네슘 판재를 이용한 첫 제품으로 금속이면서도 가볍고 착용성이 좋은 마그네슘 안경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2002년부터 마그네슘 사업을 계획해 온 포스코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세계 최초 연속주조설비(Strip-Casting)에서 압연 설비까지 일괄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컴퓨터와 카메라, 휴대폰용 두께 0.4mm 판재 시험생산에 성공하는 등 마그네슘 판재 제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시 설

전남·경남 '해상분쟁' 근본 해결책 없나

전남도와 경남도 간의 어업권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26일 전남도의 '육성수면' 인근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역 6천ha를 연구·교습어업 해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5년간 수질과 유속 등을 조사하고 종래 살포 등 시감동 드라마를 만들자"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자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유일한 후보"라며 "비호남지역에서 개혁세력의 지지를 이끌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장관은 "3기 민주 정부는 소외·가난·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동서 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남북화해로 통일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서민 출신 김두관이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임현호 광주교육대 총장·박경민 전 광주YWCA 사무총장, 전남도당위원장으로 김효석 의원,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정경환 전 의원·이강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도로 맞붙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경남도의 이번 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우선 절차상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 수산법에는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은 수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경남도는 이 규정을 무시했다.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의 어업권 분쟁이 확산되면 지역감정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걱정이다. 해상경계 분쟁은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육성수면과 관련된 양 지자체의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남도와 경남도도 원칙과 상식의 선에서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길 당부한다.

금융권,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서둘러라

기업은행이 다음달부터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개인과 기업에 대출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확산효과가 기대된다.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해는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금융기관에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요구해왔다. 이자를 챙기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책임을 보증인에게 떠넘겨온 것이다.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친지나 가까운 친구 등이 연대보증을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보증을 썼다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월급을 압류당하거나 집을

팔고 가족까지 해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오죽하면 '경제적 연좌제'라는 말이 나왔을까.

기업은행의 연대보증인제도 폐지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사회에도 개인신용 평가시스템이 잘 갖춰진 만큼 금융기관이 개인과 기업의 신용 및 능력에 따라 대출액을 결정하는 것을 제도화할 때가 됐다.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보증보험제도 등을 활용하면 된다.

잠 못든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축소하거나 최소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대보증 공포'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수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는 데 동참,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연대보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느라 앞장서기 바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임금협상안 부결

2분기 영업이익 370억~1년만에 흑자

올 기아자동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원의 반대로 부결돼 여름휴가 이후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급속노조 기아차지부가 '200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의 53.5%(1만4천892명)가 반대에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찬성 46.1%(1만2천842명), 무효 0.4%(119명) 등이다.

노사는 하계휴가(7월28일~8월5일)가 끝난 다음달 초 재협상을 통해 다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기아차는 원가절감 노력에 힘입어 올 2·4분기에 매출 4조1천364억원, 영업이익 370억원, 당기순이익 614억원 등을 기록, 영업손실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기아차는 이로써 지난해 2·4분기에 영업손실 151억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내다가 1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3·4분기에 439억원 손실이 발생한 뒤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3분기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7.3%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36.1% 증가했고 지난해 2분기 151억원의 손실을 뺀 영업부문에서는 370억원 흑자로 돌아서 수지가 521억 원 개선됐다. 그러나 기아차의 상반기 전체 실적은 매출 7조9천870억원에 영업손실 367억원, 당기순이익 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추측 "김재정씨 고소 취소키로"

이명박 만형 상씨 귀국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대선 경선 캠프의 오세경 법률지원단장은 27일 이 전 시장의 차남 김재정씨가 박근혜 전 대표 측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당에서 고소 취소를 거듭 요구하고 있고 이 전 시장도 당의 화합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까지 터진

만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고소 취소 배경에는 그동안 검찰 수사로 의혹을 대부분 털었다는 판단과 함께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인다.

한편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이 전 시장의 만형 상씨도 이날 오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외)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2-4918)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제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겉도...속도 타는 잔인한 '三伏'

영랑 생가·김환기 가옥 중요민속자료 지정

'모란이 피기까지'의 시인 영랑 김윤식의 생가와 신안 출신 서양화가 김환기 가옥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강진 영랑 생가(사진) 등 전통 가옥 4채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고한다. 27일 밝혔다. 또 경북 봉화 송석헌(松石軒)과 경북 청송 송소(松濤) 고택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다.

강진 영랑 생가는 전형적인 부농가의 생활 공간으로 배산과 조망이 함께 어우러졌다. 20세기 초반 전통한옥과 근대 건축물의 과도기 가옥으로 문화변용의 형태를 엿볼 수 있으며 영랑의 문학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신안 김환기 가옥은 신안군 안좌면 읍동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건물 좌측에



안채, 우측에 화실을 배치했다. 안채는 20세기 초에 지은 건물로 김환기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해방 후 작품활동을 한 곳으로 원형이 잘 간직돼 있다. 우측의 화실은 김환기가 주로 방학을 이용해 서울에서 내려와 작업을 한 장소다. /*연합뉴스